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시민여러분, 국회의원님.

문재인 정부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대해서 아십니까?

장애등급제 폐지는 **31년만의 장애인정책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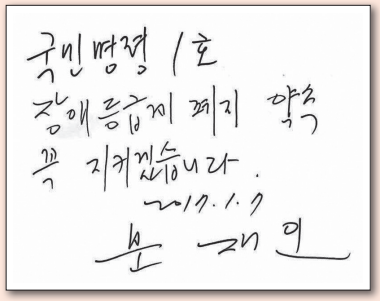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장애등급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명령1호 '장애등급제 폐지' 를 아십니까.

장애등급제는 1988년 전면적으로 시행된 장애인복지서비스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폐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31년 동안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고, 사회를 비장애인 중심으로 구축하고 유지하게 만든 장애인차별의 기본체계로 작동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에 대하여 사회정치경제적인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낙인찍고 차별적 조건을 재생산해온 핵심적 기준이었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장애등급재심사 강행으로 인하여 장애등급제 제도의 모순이 극명하게 표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송국현, 박진영, 김주영, 오지석, 권오진 등 많은 장애인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2012년 8월 21일부터 시작되어 1,842일동안 우리는 광화문 지하차도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쳤습니다. 그 외침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명령1호 약속이 되었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정책과제이기도 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31년만의 변화, 그러나.

2019년 7월부터 시행되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31년만의 장애인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기대와 1,842일의 광화문 지하차도에서 외침에 전혀 미치지 못한 계획입니다. '10원짜리' 예산을 가지고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단계적 사기행각'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짝퉁'입니다.

장애유형과 개인에 맞추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공염불일 뿐입니다. 예산에 맞추어 장애인의 권리를 잘랐습니다. 점수표를 조작해서 장애유형별로 갈등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중국이 오랑케를 다루는 전형적인 '이이제이(以夷制夷)' 수법으로 장애인들을 점수표에 가두고 장애인 유형별로 갈등만 일으켜 관리·통제하려 합니다.

☞ 결국 1~6등급의 장애등급제가 596점의 점수제로 나누어버린 '가짜' 등급제 폐지입니다.

> 2019년 시작되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 왜 단계적 사기행각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은 2018년 예산 총액 2.2조원에서 2019년 예산안은 2.7조원으로 5천억 가량 증액했다고 역대 최대의 증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단위 : 백만원)

2018년 예산(A)	2019년 예산안(B)	증감(B-A)
2,211,281	2,724,750	513,469

먼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2018년 6,906억원에서 2019년 9,684억원으로 늘어나서 2,778억원 증액됩니다. 그 증액 비율은 2019년 증액 예산 5,134억원의 54%를 차지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단위 : 백만원)

2018년 예산(A)	2019년 예산안(B)	증감(B-A)
690,674	968,477	277,803

그 증액의 내용은 2019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활동지원서비스의 임금 단가인상분과 이용 대상자 확대 7천명분을 반영한 것에 불과합니다.

산 출 내 역

* 대상자 확대 : ('18년) 71,000명 → ('19년) 78,000명 (☞ '16.12.기준 = 79,822명 ※초과상태)
* 단가인상 : ('18년) 10,760원원 → ('19년) 12,960원 (☞ 활동지원사 근로기준법준수 노동 불가수준)
* 월평균 급여량 : 109.8시간 ('18년 동일)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가 '16년 12월 기준으로 79,822명이기에 '19년 기준 78,000명은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로 2019년7월부터 활동지원 신규 이용자가 늘어나고, 급여가 평균 5시간이 증가한다고 계획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산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중증독거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은 제도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갇혀진 예산에서 점수표만 조작해서 장애유형별 급여량 증감으로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 24시간 반영 · 활동지원사 노동권리 보장 · 65세 이상 제한 폐지

2 장애인 연금대상이 중정도(3급)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연금 예산입니다.

장애인연금은 2018년 6,008억원에서 2019년 7,197억원으로 1,188억원 증액됩니다. '19년 예산증액분의 23%를 차지합니다.

장애인연금예산 (단위 : 백만원)

2018년 예산(A)	2019년 예산안(B)	증감(B-A)
600,877	719,735	118,858

그 증액의 이유는 장애연금 기초급여액이 '19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연금'이라 부르기에 수치스러운 '용돈연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7년 12월 19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3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하여 '19년 7월부터 기존 1~6등급 표현은 사라지고 (중/경)정도로 기준을 변경하여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준비하였습니다.

당연히 단계적 폐지에 맞추어 장애인연금 대상이 현재의 1급, 2급, 중복3급이라는 터무니없는 기준을 '19년 7월에 중정도(3급)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 논의는 '22년으로 미루어버렸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입니다. 장애인의 41%가 필요한 서비스로 소득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가 없어 소득이 없는 중증장애인(3급까지) 대상이 확대되기를 '장애등급제폐지민관협의체'에서 강력히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추진방향에 장애인의 필요도를 조사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은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3 개인·유형별 맞춤형 서비스가 개발 및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개인·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서비스 확보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추진배경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획일적인 장애등급이 아닌 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 다영한 서비스 욕구와 필요도를 평가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 합니다.

그러나 '19년 7월부터 제공되는 돌봄서비스는 4가지로 기존의 활동지원서비스, 보조기기서비스, 응급안전서비스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을 가장 가로막는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를 계속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로 제공하겠다는 서비스는 기존의 수준을 변형·왜곡하여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유형별로 맞출 수 있는 신규서비스도, 기존서비스의 확대도 없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핑계대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살아갈 주간활동, 일자리, 문화예술활동지원, 평생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는 여전히 (-)수준에 불과합니다. 시각장애인은 돌봄지원 필요도 평가의 점수 하락시키고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개발이나 예산확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수화·문자서비스도 확대하거나 권리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척수장애인이 요구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도 무응답입니다. 정신장애인 등 나머지 유형의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보이지 않고 고민의 흔적도 없습니다.

결국 개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맞춘 조작에 불과합니다. 착시효과를 노리는 사기행각의 전형입니다. 눈가리고 아웅하기입니다.

4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입소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31년만의 변화'이지만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서비스는 '19년 7월 이후에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장애인탈시설정책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탈시설정책을 약속하였고 '19년부터 4개 지역에 60명도 되지 않는 중증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겠다고 28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애초에 탈시설민관협의체에서 협의된 최소한의 인원인 130명 탈시설지원 약속은 헛발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탈시설 정책이 최소한의 신뢰를 가지려면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31년의 변화에서 감옥같은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는 막아놓고 탈시설을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대기자가 많다는 이유로 입소는 계속 강행하겠다는데, 그 대기자들이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급하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 방향입니다.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시민여러분, 국회의원님!

예산의 반영없는 문재인 정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단계적 사기행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단계적 사기행각'을 함께 막아주십시오.

31년의 변화 속에 여전히 10원짜리 시혜적 삶을 강요하는 차별을 막아주십시오.

시민여러분, 국회의원님!

이제 대통령님 임기 내('22년)에 장애인복지예산도 **OECD '꼴찌'에서 '평균'으로 갑시다.**
'17년 기준(1.9조)으로 4배의 예산(8조)이 OECD 평균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OECD GDP 11위 아닙니까?
충분한 가능한 경제규모의 나라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기준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예산 (☞ 2019년 국회제출 예산안) OECD 장애인복지예산 꼴찌	1.9조	2.2조	2.7조	?	?	?
임기 내('22년) 장애인정책국예산 OECD 장애인복지예산 평균 수준 '17년 1.9조 ☞ '22년 8조 (4배)	1.9조	2.2조	3.5조	5조	6.5조	8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
책임 있는 포용국가
장애인의 권리 보장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2019년 예산 요구안

분 야	사업명	2019년 요구안	2019년 정부안	결 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9,746억원	7,197억원	중증장애인 대상확대 (1,2,중복3급 → 3급) •2,549억원 증액(6개월 예산) : 미반영 •'19년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기 반영
	장애인활동지원	1조4,799억원	9,684억원	•이용자 확대 7만8천명 → 10만명 •월평균시간 109.8시간 → 130시간/월 •수가인상 12,960원 → 14,150원 ☞ 5,114억원 증액 미반영
	장애인 탈시설	59억	28억	•130명(년) 탈시설 지원 예산 42억원 ☞ 65명 지원으로 삭감; 28억원 (14억 삭감) ☞ 탈시설지원센터(5개소) 17억 삭감
	대구시립희망원	21억	0원	시범사업 예산 없음.
	중증장애인자립 생활센터지원	64억	42억	♣ 13년째 예산동결. •69개소에서 80개소 지원 •1억5천 → 2억 증액 ☞ 22억 증액 미반영
	뇌병변장애인지원	16억	0원	매년 미반영
	발달장애인지원	736억	346억	♣ 문재인정부의 발표로 18년(85억)대비 19년 304억 증액되었음. 부모연대 736억 증액요구에서 삭감된 예산 •390억 증액 요구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총예산 규모		3조5,470억원	2조7,326억원	♣ 2019년 정부예산안의 8,144억 증액 요구.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지 역맞춤형취업지원	96억	7억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TF 협의 예산(96억) •기재부 89억 삭감
	장애인인식개선지원	169억	31억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TF 협의 예산(169억) •기재부 138억 삭감
	장애인취업지원	499억	168억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TF 협의 예산(499억) •기재부 311억 삭감
문화예술 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예술지원 (함께누리)	98억	40억	•문화예술TF에서 70억 증액협의 •기재부 12억 반영/58억 삭감
국토교통부	저상버스 도입	870억	340억	•국토부 3차 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 저상버스 도입 예산 : 기재부 530억 삭감 •기존 저상버스 대폐차 예산 : 기재부 미반영
	특별교통수단	41억	27억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비 기재부 14억 삭감

장애인 동료여러분,
장애인관련단체 및 기관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시민여러분, 국회의원님.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31년만의 변화,
장애인정책 근본적 변화의 패러다임
장애인등급제가 '진짜'폐지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십시오.
힘을 실어주십시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2019년 장애인예산쟁취 천막농성

장애등급제 폐지는 31년만의 장애인정책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우리 함께 장애인의 삶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냅시다!

'예산' 보장 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단계적 사기행각이다.

-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3급) 확대
- 개인 · 유형별 맞춤형 다양한 서비스 확대 및 예산 보장
- 중증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금지 및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확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주소 :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506호 | 전화 : (02)738-0420
팩스 : (02)6008-2973 | 이메일 : kc-cil@hanmail.net
함께 해주십시오. 투쟁기금 모금을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88191 | 예금주 : 조성남